코로나 이후, 건축과 도시공간의 변화를 생각하다

박소현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소장

코로나 이후 건축과 도시공간, 우리는 어떻게 고민해야 하는가

올해 1월 하순 국내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19(이하 코로나19) 환자가 처음 확인된 이래 매일매일 확진자, 격리자, 해제자, 완치자 그리고 안타까운 사망자의 수를 헤아리며 우리는 어느덧 다섯 달의 시간을 보냈다. 코로나 이전의 평이한 생활은 이미 까마득한 먼 과거처럼 느껴지고, 상상하지 못하던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이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가져온 이 새로운 상황과 그 대응에 대해 연일 많은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학회, 연구소, 정부부처, 지자체, 시민단체 등 모든 기관과 주체가 코로나19와 관련된 포럼을 하루가 멀다 하고 연다. 경제, 사회, 보건, 복지, 노동,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코로나19가 가져온 영향과 앞으로 초래할 여파에 대해 앞다투어 논의한다. 절박한 상황인 만큼 새로이 학습해야 할 내용이 많고, 건축과 도시공간의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니 대부분 챙겨 보게 된다.

이제까지의 논의가 코로나19의 대략적인 확산 경향과 파급 영향력 및 방향성에 관한 초기 정보의 성격이라면, 이 초기 단계 학습 이후 논의에서는 보다 실증적인 근거에 기반한 정밀한 진단과 구체적인 연구 어젠다가 동반되고, 그로부터 현실적인 해법 모색 구조가 세세하게 기획되어야 한다.

코로나 이후 건축과 도시공간의 변화, 이에 대한 예측과 대응은 진정 어떠해야 할까?

뉴노멀의 문턱에서: 정확한 평가, 치열한 분석 있어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넘쳐나는 세미나 덕분에 우리 사회가 이제 코로나 이전 시대로 결코 돌아갈 수 없고, 감염 · 격리 · 거리두기 등으로 파생 · 확장되는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소위 뉴노멀이나 뉴리얼리티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을 우리 모두 어렴풋하게라도 수긍하고 있다. 당장은 어렵지만 코로나19가 어떻게든 종식되더라도 이후 계속 진화할 새로운 감염병의 시대에 대비하며 살아야 한다는 점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추세이다.

그런데 지금 예측하고 있는 뉴노멀과 뉴리얼리티는 일상 생활환경에서 어떤 실체적 의미를 갖고, 또 어떻게 작동하게 될까? 코로나19 관련의 거주밀도나 선호도시 변화에 대한 일부 발제자들의 선언적 주장은 이미 공감대를 잃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서울과 수도권을 떠나겠다는 징표가 없고, 뉴욕을 벗어나겠다는 응답 수치가 보이지 않는다.

한편 오래도록 선진국이라 당연히 여겨왔던 유럽과 북미 여러 나라의 대도시에서 코로나19로 위협받는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내지 못한 채 맥없이 허둥대는 상황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이와는 극명히 대비되는 K-방역체계를 내세우며 우리가 매우 빠르고 효과적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대응을 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후 국민행복도, 생활만족도, 노인빈곤율, 청년 자살률 등 거의 모든 국가지표에서 자부심을 갖기 어려운 정황을 보여 우울했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 이후 상황이 크게 바뀌고 있다. 불과 작년만 하더라도 설문 응답자의 57.4%가 한국을 '헬조선'이라 생각한다고 답했지만 올해 5월에는 25.9%로 격감하고, 다시 태어나도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겠다는 비율이 작년 46.4%에서 63.7%로 증가하였다(KBS 외 2020).

해외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K-방역이 자랑스럽고 감사하면서도,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균형 있는 점검도 필요하다.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유발하는 고통의 강도가 적지 않다. 지난 시절을 회고할 때 IMF 시대의 어려움과 당시 상황의 잘잘못을 이야기하듯 코로나19 시대의 어려움을 냉정하게 이야기할 때가 곧 오리라 전망한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중요한 점 가운데 하나는 K-방역 현상에서도 나타났듯이 결국 우리가 잘하는 것, 우리가 잘하지만 놓치는 것, 우리가 잘하고 싶지만 사실은 잘못하는 것 등을 우리 스스

ⓒ연합뉴스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치러진 4.15. 총선 풍경
이때 보여준 빛나는 시민 의식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로가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찬찬히 알아내어 서로 인정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건축과 도시공간의 변화에 대한 연구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항목이라 생각한다.

K-방역에 관한 여러 각도의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잘하는 점의 근저에는 강력한 행정력 · 동원력 · 실행력을 갖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체계가 있고, 이에 호응하는 시민사회의 성숙한 참여도 있다. 보건 · 의료계의 혁신적인 그간의 준비와 책임감 있는 헌신도 있다. 앞서 있는 정보통신기술도 큰 역할을 한다. 반면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서로 지킨다는 대의에 공감하며 감시사회, 국가주의, 혹은 경찰국가에 대한 우려를 잠시 뒤로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경계심도 늦추어서는 안 된다. 인권에 대한 감수성도, 포용력도 그 우선순위를 낮추지 않고 깨어 있어야 한다.

사회현상과 도시공간 잇는 성찰을 시작할 때

코로나19 이후 겪게 될 건축과 도시공간의 변화에 대해 잘 예측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는 코로나 이전 시대에도 우리의 건축도시현상을 스스로 냉정히 해석하며 대응방안을 차근차근 모색해 본 적이 별로 없었다. 이 점을 겸허히 인정하고 접근해야 한다. 우리의 지난날 도시

짓기와 건축짓기 행태는 우리의 삶과 환경의 문제를 세세히 정의하며 우리 고유의 해법을 모색하기보다는 큰 틀에서 신속하게 국토 인프라를 조성하고 대량으로 주거를 공급해야 한다는 등의 거대 목표를 위해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를 급박히 수행하는 것에 치중했었다. 시대적 과제였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소위 해외의 선진 우수사례를 속히 참고하여 낙후된 우리 현장에 신속히 적용하는 구도를 당연시하였고, 어느 정도의 성공을 이루며 오늘에 이르렀다.

코로나19 상황은 이제 건축과 도시공간 변화의 해석과 대응을 연구하는 우리에게 매우 복합적이고 동시에 역설적인 성찰을 촉구한다. 세부적으로 K-방역의 성공적인 환경 요인을 현장에서 다시 분석할 필요가 있겠지만, 우리가 잘하는 것 중에는 예를 들어 중앙정부의 역할도 있다. 건축도시공간정책에서 지역 현장의 강점을 파악하고 주민참여 및 주민소통의 요소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중앙정부의 역할을 약화 혹은 배제해 가기보다 오히려 이를 견제하며 어떻게 창의적으로 그 지원체계를 지역 현장에 합당하게 재적용하고 활용할 것인지도 새삼스레 다시 고민해야 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번 K-방역의 긍정적인 평가를 계기로 행여 이전 시대의 경직된 동원체계나 행정만능 태도로의 회귀 본능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닌지 조심히 경계해야 한다. 우리가 잘하는 것, 그러나 잘하느라고 놓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더 감수성 있게 접근해야 하리라 본다.

참고문헌

1 KBS, 시사IN, 서울대학교. (2020). 코로나 이후 한국사회 인식조사.